
정책 정보

디지털 경제 시대의 공정정책 방향

- (개요) 5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 시대 및 지식 기반 경제로의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함
- (주요 방향) '지식공정위'로의 전환, '사이버 소비자 정책' 추진, '네트워크 독점' 등 새로운 경쟁정책상의 문제에 적극 대응 등 3가지 방향에서 수립됨
- 첫째, 디지털 기술과 웹을 기반으로 한 지식공정위 구현
 - 공정거래 종합지식경영시스템 구축, 홈페이지(www.ftc.go.kr)를 통한 자료 제출 및 정보제공 서비스 실시, 사이버정책평가단을 통한 각계의 의견 수렴, 여론조사 시스템 구축 등
- 둘째, 적극적 소비자를 활용한 사이버 소비자 시책의 추진
 - 전자상거래 감시단 네트워크와 소비자종합 홈페이지를 활용해 전자상거래 분야의 부당행위 감시 기능을 제고, 전자상거래 부당행위에 대한 24시간 감시체계 및 쇼핑몰 평가사이트 구축, 방문판매법을 전자상거래분야의 소비자 보호 기본법으로 보완하는 법개정 추진, 전자상거래 전담부서인 (가칭)전자거래보호과 신설 등
- 셋째, 새로이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와 독점 문제에 적극 대응
 - 오프라인과 온라인 업체간의 갈등에 적극 대응, 기업간(B2B) 전자상거래상의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, 비즈니스모델(BM) 특허의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, 전자상거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의 개혁 등
- (평가) 새로운 환경 하에서의 불공정 행위 및 소비자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적합한 조처로 평가되어짐. 다만 보다 신속한 추진으로 진행과정에 초래될 수 있는 혼란과 부작용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할 것임

(민주홍 연구위원 jhmin@hri.co.kr ☎ 3669-4015)

최근 주요 정책(2000. 4. 24 ~ 5. 7)

1/4분기중 해외직접 투자 실적 분석	재정경제부 (5.6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00년 1/4분기중 해외직접투자는 신고 기준으로 393건(+83.6%), 784백만달러(+3.4%)로 집계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투자실행 기준으로는 359건(+117.6%), 660백만달러(+20.2%) - 지역별로는 아시아 및 북미지역이 증가한 반면, 유럽 및 기타지역에서는 감소
6대이하 기업집단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 계획	공정거래 위원회 (5.4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점 조사 사항: 한계기업 퇴출을 지원, 비핵심업종 및 이업종 영위 회사에 대한 지원, 금융기관을 매개한 지원, 1~5대 조사결과 다수 적발된 지원 행위(CP 고가 매입 등)
채권시장 구조의 선진화 추진 방안 논의, 마련	재정경제부 (5.4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채통합발행제도의 도입, 딜러간 중개회사(IDB) 설립, 채권전문딜러 육성, 투신과 Mutual Fund의 국채전용펀드 허용, 채권 거래 정보의 투명한 공시체제 확립, 채권평가시스템 개선 등 - 필요한 입법조치를 조기에 완료하여 2/4분기부터 추진 계획
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마련	재정경제부 (5.3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거시경제 운용을 '저금리(8%대)-저물가(2.5%선)' 체제 유지에 둠 - 성장률 목표 상향(6%대→7~7.5%), 경상수지 흑자 목표 축소(120억달러→80~100억달러)
4월 무역수지 동향 발표	산업자원부 (5.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4월 무역수지(통관기준)가 2억 2,500만달러 흑자(1~4월 누계 7억 7,300만달러 흑자)에 불과 - 수출은 136억 4,100만달러(+18.6%)를 기록한 반면 수입은 134억 1,600만달러(+47.4%)에 달함
기업지배구조 개선안 마련, 법제화 추진 방침	법무부 (5.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독주주 대표 소송권 도입, 집중투표제 의무화, 주주 집단소송 제 도입 등 - 열람 가능한 주주의 지분 하향(3%→1%) 조정, 최고경영진의 통상적인 경영활동도 이사회 승인 의무화, 계열사 이해관계자간의 대규모 거래시 주주승인 의무화 등
공모주식 배정제도 개선안 의결	금융감독원 (5.3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투자신탁, 은행신탁, 증권투자회사가 5월 중순부터 발매하는 신상품에 공모 주식의 일정비율을 우선 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업공개 및 협회등록 공모의 경우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 배정분에서 각각 5%씩 차감하여 신상품에 10%를 우선 배정 · 상장, 협회등록 법인의 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일반청약자 배정분에서 공모주식 20%를 차감하여 신상품에 배정

주요 정책 정보(2000. 5. 8 ~)

5.12(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(재정경제부) 경제정책조정정례회의 개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대한 5조원 가량의 공적자금 투입계획을 확정 짓는 것이 핵심 의제로 다루어질 것임
---------	--